

# 한국화교의 정착과정과 실패요인

- 경제·정치·사회적 지위 불일치를 중심으로 -



이 용 재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 국문요약

한국화교는 임오군란 이후 1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화교정착이 실패한 국가이다. 그동안 그 원인을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제정책에서 찾았지만, 이 글에서는 화교에 대한 한국국민 다수의 인식이 포용보다는 배제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화교의 경제적 지위에 비해 낮은 정치·사회적 지위를 제시한다. 이러한 지위불일치가 이들에 대한 배제를 촉발시켰다.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지지를 받으면 그에 맞는 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한국화교는 청일전쟁과 중국대륙의 공산화로 경제적 지위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사회성원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경제적 지위와 함께 사회성원으로서 정치·사회적 지위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오늘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 또한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정치·사회적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성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화교, 이주정책, 경제적 지위, 정치·사회적 지위,

## I. 서론

오늘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일은 많은 국가에서 일상에 가까운 일이 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간도로의 대량이주가 시작되었고, 일제의 의한 강제병합시기에는 징용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해방이후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로 떠난 7,900여 명의 광부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떠난 1만 226명의 간호사들, 1970년대 중동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근대사 역시 이주의 역사였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은 아직 제대로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자본의 이동과 함께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국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한 민족개념에 기초한 시민권을 토대로 국가의 역할 또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 중에서 다문화사회의 실패, 이주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오히려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개념에 새롭게 집착하기도 하고, 다문화사회에서 효과적인 연대의 방식은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노동력으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 약해지면서 사회불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을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민자의 추방과 배제를 요구하기도 한다.<sup>1)</sup> 물론 한국 사회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1980년대 후반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저소득 단순기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1990년대 초에 이러한 3D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1991년 11월에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즉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를

---

1) 유명기(2004)에 따르면 차별화와 배제는 인간 사회의 내재된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우리의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우리 의식이란 여기서 배제되는 타자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쳐 현재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변화하고, 방문취업제(H-2)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유입노동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심화된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는 농촌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이주민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귀국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와 달리 정착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가 다른 이들은 한국인 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었다.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그들 어머니의 나라 문화와 언어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배제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국내체류외국인과 결혼이주민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2015년 2월 28일 현재 체류외국인은 총 1,787,728명으로 9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1,384,508명, 90일 미만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은 403,220명으로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중이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비하여 체류외국인은 약 14.6% 증가하였다. 특히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913,506명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7.8%, 베트남 7.2%, 태국 5.0%, 필리핀 2.9%, 일본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국민의 배우자는 2010년 141,654명에서 2015년 2월 28일 현재 150,672명으로 증가하였고, 혼인귀화자 또한 2010년 66,474명에서 2015년 2월 현재 103,16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4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5만 5,780명으로 2012년도 36,954명에 비해 약 18.8%가 증가하였고, 2009년 2만 6,015명으로 전체 학생의 0.3%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3년도에는 0.9%를 차지함으로써 0.6%p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다문화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 22,01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4.7%를 차지하던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비중은 2013년 21,290명으로 0.2%p 증가하였다. 이처럼 매년 약 2만 명 정도의 다문화가정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2014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 중 75.0%가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살펴보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의 역사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 군대가 국내에 주둔하면서 이들을 따라온 상인들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화상·화교의 역사가 있다. 이미 1세기를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화교의 수는 1930년대에는 6만 명에 이르렀고, 1948년에도 약 17,443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었다. 1971년 32,605명, 1972년 32,989명으로 최고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해서 1980년 29,623명으로 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22,047명이 되었다(김명희 2012, 6).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의 형성 및 유지 그리고 정착과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 거주국의 문화와 원주민들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1980년대 후반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민들과 한국의 화교상황은 일정부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숙 외 2012, 181). 사실 화교에 대한 관심은 『조선왕조실록』, 『총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화교노동자의 조선으로의 대량 이주에 대해 당시 조선의 유력 신문들이 보여주는 깊은 우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시각은 결국 민족주의적 배타성과 그에 따른 이민족에 대한 경계로 표현되고 있다(송승석 2010, 184). 물론 여기에는 화교의 유입과 정착과정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기도 한다.

화교의 유입은 자주독립을 희망하던 조선에 찬물을 끼얹는 청나라의 주권간섭의 결과였으며,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 폭압은 제국주의의 그것과 유사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과 더불어 한국노동자의 경쟁 상대였으며, 해방이후에는 민족경제 육성의 걸림돌이기도 했다. 더구나 중국본토의 공산화로 인해 냉전시대의 화교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가해자였으며, 이념적 대립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화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소수자였다.<sup>2)</sup>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의 화교의 정착은 다른 지역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새로운 이주자로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방안의 모색을 위해 화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바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작은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화교란 무엇인가

화교(華僑)의 사전적 의미는 중국을 의미하는 화(華), 그리고 여행하는 신분 혹은 일시적

---

2) 소수자 배척의 요인으로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을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감정적 요인인 인지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과 정치·사회적 요인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은 각각의 요인 중 어느 하나가 배척의 중요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 요인 사이의 격차(隔差)가 배척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교(僑)의 합성어로 ‘중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중국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들 중에서 이주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동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교를 단순히 여행하는 신분 혹은 일시적 체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화교의 ‘교(僑)’라는 단어가 ‘일시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뜻에서 정주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 것은 5-6세기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남하한 북부출신 유력가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3세말 송나라가 몽골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면서 다수의 피난민과 유신(遺臣)들이 무역상들과 함께 중국 연해를 떠나 동남아시아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면서 화교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16세기말 이후 중국인의 해외이주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규모가 한층 더 커졌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이주자들은 여성이나 어린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주가 용이한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정착지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랑자이거나 범법자들이었기 때문에, 1370년에서 1893년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이창호 2014, 7). 따라서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해외이주는 1840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패하면서 청나라의 문호가 강제 개방되고, 폐쇄적인 해금(海禁)정책이 폐지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서구열강에 의해 미대륙 개척, 동남아시아 및 대양주 개발을 위한 노동력 조달이 요구되면서, 중국 남동부 지역의 중국인들을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고, 전란을 피해 스스로 중국을 탈출하기도 하였다. 1893년 청나라가 ‘외국여행금지법’을 폐지하고, 1896년 일본과 ‘교역 및 선박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화교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왕궁우(Wang 2000, 39-71)는 화교라는 용어의 등장을 근대 민족주의 산물로 보고 있다. 외세침략에 의해 약해진 중국이 호전적인 서구열강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애국심을 요구하게 되면서 외국에 나가있던 중국인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화교는 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규범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보호제공을 수반해야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화교라는 용어는 결국 거주국에서의 충성심을 의심받게 하였고, 이것이 다른 민족들의 민족주의와 부딪힐 때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중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된 화교라는 개념보다는 ‘교(僑)’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화교를 중국국적소지자로 제한하고, 문화적 민족적 개념으로서 ‘화인(華人)’을 적극 부각시킴으로써 ‘화교화인(華僑華人)’을 일반명사로 사용하고 있다(김정국 외 2003, 510-511).

화교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 많은 화교들이 제국주의 이전 민족국가가 성립하면서

대거 해외로 이주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국적, 혈통, 문화적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이덕훈(1998)은 화교를 “제국주의 이전에 대규모로 해외로 이주한 중국민족 및 그 자손으로 거주 민족과 동화했거나 또는 중국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주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대만, 마카오, 홍콩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화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는 약간의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교의 범위에 제외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들 지역(대만, 홍콩, 마카오)의 중국인들에 대해서 동포(compatriot)를 의미하는 ‘통바오(同胞)’라는 명칭으로 화교와 구별해서 쓰기도 한다(Pan 1999, 16).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화교가 부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화경제권’이나 ‘화교네트워크’의 논리적 전개를 위해 화교의 범위는 신축적으로 조절되기도 한다(김경국 외 2003, 511). 그리고 오늘날에는 ‘중국인 이산민 Chinese diaspora’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화교화인(華僑華人)’이라는 용어와 함께 화교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충성심, 문화적 우월감, 중국으로의 귀환 등의 교(僑)가 가지고 있는 국민국가적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인 이산민’이라는 명칭은 교(僑)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해 준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화교라는 명칭대신에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Pan 1999, 17).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화교화인, 중국인 이산민으로서 새로운 집단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던 구화교의 2세나 3세를 포함하여 개혁개방 이후에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신화교(新華僑)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조정남(1998, 48)에 의하면 신화교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새로운 중국인들의 이동에 따른 유입현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유입된 중국본토인을 의미한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단절되고, 1992년 새롭게 국교수립을 하기 전까지 지속된 한중 단교로 인해 한국으로 중국인의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92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건너오는 중국인들을 이전의 화교들과 구별해서 신화교로 부르고 있다(양필승 외 2004, 104-105). 한국의 신화교는 중국 내의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학을 오거나, 구화교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경우와 달리 1990년대 초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족과 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신화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 2. 화교에 대한 중국의 대응

앞서 지적하였듯이, 화교는 19세 이후 중국이 서구열강에 의해서 개방되면서 대규모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화교들이 급증하면서 일부국가에서는 배화정책이 채택되기도 했다(임채완 외 2006, 11).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지만 동시에 대만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다(Pan 1999, 16). 청나라가 건국 268년만인 1912년 신해혁명으로 막을 내리면서 중화민국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고, 국민당은 화교를 ‘혁명의 어머니’라고 지칭하였다. 화교는 혁명 당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화민국 성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이창호 2014, 8). 중국 공산당 또한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이용한다는 통일전선방침을 지향하면서 해외화교를 인민공화국의 유기적 구성분자로 보고, 화교와의 단결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문화·경제적 격동을 가져왔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의 결과 국내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부르주아적 잠재의식을 가진 교권(僑眷)<sup>3)</sup>이나 귀교(歸僑)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해외 화교들 또한 화교투자공사에서의 투자와 이익이 동결되고, 화교가족과 귀국화교의 가산은 몰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문화대혁명 종식 이후 중국정부는 화교와 새로운 평화공존, 우호외교를 전개하였고,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더욱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손준식 1998).

그러나 1970년대까지 화교에 대한 중국지도층은 이들과의 특수 관계보다는 현지에서의 정착을 강조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은 “태국국적을 취득한 태국의 화교는 태국인이다”<sup>4)</sup>,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화교의) 조국은 캄보디아이다”<sup>5)</sup>라고 언급하면서 현지국적을 취득한 화인과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다(최승현 2008, 267). 이뿐만 아니라 1956년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도 버마 화교지도자와의 담화에서 ‘시집 간 여인은 이미 친정집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통시대 시집간 여인네의 처지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친정은 친정일 뿐 현재의 남편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화교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반둥회의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공식적 협장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 정부는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3) 교권은 화교·귀교의 국내에 있는 권속 즉 화교·귀교의 배우자, 부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부계, 모계), 손자(부계, 모계) 및 화교·귀교와 장기간에 걸쳐 부양관계에 있는 기타친족을 의미한다(손준식 1998, 60).

4) “毛澤東的華僑觀”，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僑務辦公室，僑務工作研究，<http://qwgzzyj.gqb.gov.cn/qwhg/136/900.shtml>(검색일 : 15/04/25).

5) “毛澤東論華僑的國籍問題”，華人中心，<http://202.116.13.5/news/content.asp?newsid=8989> (검색일 : 08/11/22)

의 국적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국적 가운데 어느 하나의 국적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庄國土 1993, 314).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화교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화교의 현지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20세기 초반의 동남아시아 화인사회에서 형성되었던 화교들의 중국 민족적 정체성 또한 1950년 이후 국민적 정체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화교에서 화인(華人)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임채완 외 2006, 15).

1956년 인도네시아의 화교상황을 살펴보면, 209만의 화교 가운데 중국에서 출생하여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이민 1세대는 약 15.4%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생한 자들이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도 1947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지에서 출생한 화교의 비율이 각각 63.5%와 59.9%로 다수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화교 1세대와 비교하여 현지에서 출생한 이들은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반면에 모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지에 뿌리내려져 있는 삶과 그 미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현지의 국적을 선택한 화교는 더 이상 화교가 아닌 “화인”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최승현 2008, 265). 물론 화교의 현지화가 단지 국적선택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화교의 현지화는 현지국가의 동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화교의 정착과정에서 현지국가의 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한 박은찬의 연구(1979)에 따르면,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화교의 정착과정을 비교하면서 태국의 경우 정부와 국민의 태도가 우호적이어서 화교들이 태국인으로 쉽게 동화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태도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인으로서 화교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화교에 대한 차별정책과 이에 대한 반감으로서 화교들의 민족교육이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의 시민권 획득이 민족적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두섭(1997)은 태국 화교들은 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이중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시아의 각국 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다양한 각도에서 화교의 현지 국적 취득을 강요하는 한편, 이들을 현지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현지인 우선정책을 펼쳤고, 인도네시아는 화교가 도시에서 소매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외에 화교의 조직설립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중국어 신문잡지를 폐간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중국어의 사용 및 중국어로 된 노래, 영화 등의 수입 또한 금지시켰다. 이처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단절되고, 현지의 강압적인 동화의 강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화교들은 생존을 위해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국적 취득을 통한 현지에서의 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남아시아 화교의 90%이상이 현지의 국적을 취득함으



로써 중국의 국적을 포기하였다. 물론 이로써 정치적, 법률적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지만, 디아스포라로서의 화인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문제, 즉 모국과 현지국가 사이의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갈등의 가능성은 결코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최승현 2008, 265).

이처럼 화교의 현지 동화는 중국정부가 취한 화교들의 현지화 정책과 현지의 화교들의 동화정책의 결과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화교에 대한 배제가 화교의 동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배타적 민족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지화 과정은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Ⅲ. 한국에서의 화교 유입과 정착과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덕훈(1998)의 지적처럼 화교를 “제국주의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민족 및 그 자손으로 거주 민족과 동화했거나 또는 중국민족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류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교의 역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1592-1598)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임진왜란에도 명나라에서 4만 8천명의 원군을 파견하였으며, 제2차 침공(정유재란, 1597)에는 20만 명을 파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원군으로 참전한 두사충을 비롯한 많은 명나라 장수들이 전쟁이 끝난 후 이런저런 이유로 귀향하지 못하고 조선에 남아야만 했다. 그러나 근대 민족개념과 국경의 확립을 고려한다면, 한국 화교의 역사는 1882년(고종 19년) 임오군란 때 조선으로 파견된 광동성 수사제독 우창칭(吳長慶) 휘하 군대를 따라 상인 40여 명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임오군란은 강화도조약(1876) 이후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 군졸들을 차별대우하면서 이에 저항하여 일어나 군란이었다. 근본적으로 외세에 대한 저항이었기에 쇄국정책을 주도했던 대원군의 재집권이 이루어졌으나, 청나라의 정치적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이어서 청나라는 1882년 8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함으로써 청나라 상인의 조선 내륙여행과 통상권을 인정받아, 조선의 상권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장정(章程)은 조선의 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조선 내에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청에 대한 조선의 종속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정간섭을 이유로 조선의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이와 동시에 청나라는 화상(華商)을 통해 일본과 상권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청나라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에서 화상들은 처음에는 인천을 비롯한 항구를 중심으로 그 세력권을 형성하다가 이후 교통망을 따라 내륙지역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가 패하게 되자 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다수는 조선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화교의 역사는 임오군란과 청일전쟁 전후로 유입과 정착을 그 시작점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화상의 전성기는 임오군란(1882)에서 청일전쟁(1894)까지의 짧은 시기였다. 1898년 ‘의화단의 난’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탈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정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조선과 인접해 있던 산둥지역이 ‘의화단의 난’의 진원지라는 이유로 청나라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면서, 탄압을 피해 조선으로 향하는 이민이 급증하게 된다. 재한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출신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임채완 외 2006, 12).

19세기 말부터 이주를 시작한 화교는 1883년 서울·인천·부산 등에 210명의 상인과 111명의 관리가 주재했고, 1884년에는 인천에 235명의 화교가 거주하는 등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1884년에는 인천, 1887년에는 부산, 1889년에는 원산에 화상조계지(華商租界地)가 설치되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었을 때 화교의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들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화교는 정부의 차별정책과 내국인들의 배제로 우리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김영숙 외 2012, 180). 화교들에 대한 이러한 배제의 원인은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 정부의 지원 아래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화교들의 행태에 대한 저항감도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하에 일본이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의도적으로 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 만주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발생한 중국의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sup>6)</sup>이었다. 만보산사건 이전에 이미 화교에 대한 일본인의 견제와 화교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반감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조장된 만보산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27명의 화교가 학살되고, 39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액이 250만 엔(円)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피난하는 화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대구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1930년에 대구지역의 화교는 2,384명이었으나, 1931년 말에는 1,369명으로 약 43%가 줄어들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화교감소율은 약 46%에 달하였다. 이후 중일전쟁(1937-1945)이 발발하면서 조선 내에서 화교는 적국의 국민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화교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과 중국의 자유로운 왕래가 제약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화교는 중국으로 떠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37년

6)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1931년 7월 2일), 일제가 1910년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일본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농토를 잃고 만주로 이주한 한인농민을 이용하여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관동군 특별기관이 고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허위정보를 국내에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중국인 배척사건이 일어났다.

전국의 화교인구는 1936년에 비해 약 34%가 감소하였고, 대구지역은 약 77%까지 감소하였다. 이 당시 대구의 화교인구는 고작 120명, 경북은 181명에 불과했다(이정희 2005, 79).

그러나 일제에 의해 시작된 태평양 전쟁(1941-1945)이 일제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고, 미군정(1945-1948) 기간 동안 남한지역의 화교는 ‘연합국 국민’으로서 우대를 받아 중국, 홍콩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큰 경제적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남한지역의 화교는 경제적 번영을 맞이하게 된다. 동시에 중국내전(1947-1949)이 격화되면서, 많은 화교들이 이를 피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화교인구가 다시 급증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인천에 소재한 화교무역상 13개소가 한국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서 화교의 경제력은 막강했다(박은경 1981).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외환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인이 무역회사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시행되면서 화교사회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더구나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결혼을 통한 귀화 이외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묶어버림으로써 화교의 귀화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자유당 정부는 국내 경제기반 확립을 위하여 1950년에는 외래상품의 불법수입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창고봉쇄령을 발효하였는데, 당시 창고업을 중심으로 외래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화교무역상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화교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였다.<sup>7)</sup> 1961년에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모두 박탈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화교들은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1970년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화교에게는 1가구 1주택 1점포만 허용되었고, 주택면적도 200평 이하, 점포도 50평 이하로 제한되면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업에 종사하던 화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화교들은 적은 자본의 요식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 재이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2년을 정점으로 다시 화교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국적소유국인 대만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당 정부가 해외 화교에 대해 관대한 대학입학정책과 장학금 지원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촉진되었다.

---

7) 자유당 정부에 의해 단행된 창고봉쇄령과 화폐개혁이 비록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극단적인 개혁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교들은 당시의 정책이 한국의 무역업을 좌우하고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화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믿고 있다(김영숙 외, 2012, 191).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화교들의 노력 또한 있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화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화교학교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근대적 화교학교를 세우자는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02년 인천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최초의 화교학교인 인천화교소학교를 창립하여 3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1909년에는 서울의 화교들이 한성화교소학을 세웠고, 1910년 부산에서 부산화교소학이 설립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금지되었다가 1938년 영등포, 1941년 군산, 1943년에 대구에 각각 소학교가 설립되었고, 1942년에는 서울화교고급부(1943년에는 광화중학교, 1948년에는 한성화교중학교로 개칭) 1개교가 세워졌다. 1945년에서 1970년까지 중화민국 대사관의 지원에 기대어 수원, 충주, 동두천 등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까지 총 55개교가 설립되었다. 이 때 화교의 수도 약 3만 여 명에 이르렀다. 1956년에는 중학교에 고등부를 설치하였다. 한국 내에 5개의 중학교가 있어 화교들은 고등교육까지 중국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또한 1970년대 한국사회의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을 받아 화교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주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중국집 쌀밥 판매 금지령, 서울 도심 재개발사업 등은 화교경제의 자리를 빼앗았다. 1976년에는 한국정부가 외국인학교의 한국학생모집금지조치가 시행되었고, 화교학교의 재학생 수는 대폭 감소하였다. 한성화교소학의 경우에는 256명의 한국인 학생을 퇴학시키기도 하였다. 1972년 3만 2,989명이었던 화교가 1982년에는 2만 8,717명으로 감소하였고, 1992년에는 2만 2,56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02년 2만 2,699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화교인구의 감소로 인해 조치원, 동두천, 부평, 중안, 용현, 진주, 부산 서면, 영월, 남원, 진해, 영동, 밀양 등 10여 개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화교소학교 및 광주화교중학교가 폐교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화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 1998년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2002년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어 화교들에게 거주비자(F-2) 대신에 영주비자(F-5)가 주어졌다. 그리고 2004년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화교들에게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참정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화교들은 화교학교의 학력불인정, 취업과 승진, 공공서비스, 세금과 복지혜택 등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다(이창호 2008). 화교들은 한국사회의 차별과 법·제도적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결혼을 통한 귀화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화교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국적<sup>8)</sup>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과의 결혼 역시도 대부분은 화교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아내로 취하는 방식을 택해 왔는데

8) 한국화교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화민국(타이완)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1992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도 있다. 이들 모두를 ‘중국’ 국적으로 명기하는 바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중국적 특수성을 보호, 유지하는 나름의 자구책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두고 한국사회로의 동화라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다(송승석 2010, 172).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화교들은 초기 정착단계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청나라, 중화민국(남경정부, 중경정부 포함), 타이완(1949년 이후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중국의 각기 다른 정부와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한반도의 각기 다른 정권 그리고 식민지시기 일본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권력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송승석 2010, 168).

#### IV. 화교의 정착과정의 한계

한국의 화교에 대한 인식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화상들의 진출로 화교의 역사가 시작되어 약 13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임오군란 이후 화교에 대한 연구는 1905년에서 1945년까지 이루어진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부락조사보고(제1책)—화전민, 내왕 지나인』(1924)과 『조선의 지나인』(1924), 그리고 오다우치 미치토시(小田内通敏)의 『조선에 있어서 지나인의 경제적 세력』(1926)이 있다. 특히 『조선에 있어서 지나인의 경제적 세력』에서는 중국인의 해외이주 역사에 대한 개괄로 시작하여, 한국화교의 경제적 직능을 상인, 농민, 노동자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그들의 여가생활 등 세밀한 부분까지 기술하고 있다.

해방이후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는 1963년에 발표된 구효경·김신자의 「재한화교의 실태」가 시작이지만,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고승제의 「화교 대한(對韓) 이민(移民)의 사회사적 분석」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이 논문은 수정·보완되어서 『한국이민사연구』(1973)에 실렸다. 이 연구를 통해 화교이민의 시작, 화교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화교의 각종 활동에 대해 초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한중수교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IMF로 인한 경제위기로 외자도입이 시급하게 되면서 그 하나로 화교자본의 유치를 희망했고, 학계의 대응 또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화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그에 대한 화교의 역할 그리고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에 대한 연구로 모아졌다(송승석 2010, 165). 화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화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차별적 구조 속에서 수동적 피해자로 인식되던 화교들이 능동적 행위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화교를 하나의 민족정체성 집단으로 인식하던 태도 또한 바뀌어 집단 내의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특히 김기호(2005)와 이창호(2007)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인식은 청나라의 지원을 받던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공포와 함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195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무관심이 화교를 대하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그동안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많은 학자들은 한국화교가 다른 국가의 화교들과 달리 성공적인 정착을 하지 못한 주요한 요인으로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 그리고 배타적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화교들 또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차별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한국 화교들이 소수민족으로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김형빈 외 2010, 130).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 2세는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의무는 요구하면서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러나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널리 퍼져있는 화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적으로 한중간의 역학관계에서 항상 열세에 있었던 한반도 주민들의 종족적 피해의식과 근대 이후 식민주의에서 배태된 민족주의적 배타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송승석 2010, 184).

화교의 현지정착은 해당 정부의 정책과 화교의 대응이 함께 맞물려 일련의 결과를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동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민족의식에 기초한 화교들이 공동체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귀화를 통한 동화정책을 배제하고, 배타정책을 지향했다는 점이 한국사회의 화교정착과정에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화교에 대한 정책이 이처럼 그들을 배제·배타시키는 정책을 지향했던 중요한 원인으로 그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sup>9)</sup>는 것과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향유했던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화교는 정치·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화교의 유입은 그 시작부터 경제적 침탈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모습을

---

9) 외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을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본 이론으로 현실적 갈등이론을 들 수 있다. 현실적 갈등이론은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반되면서 이 부정적인 평가가 집단 내에 공유되고 부풀러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다(Sherif, 1966)고 주장한다.

보였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배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임오군란은 강화도 조약이후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새로운 문물과의 첫 번째 충돌이었다. 그것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첫 도전이었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대원군을 납치함으로써 임오군란은 무위(無爲)에 그치게 하고, 화교는 청나라의 비호를 받으면서 조선 내에서의 경제적 지위를 확고하게 굳혀나갔다. 이런 의미에서 화교는 자주권의 침략과 경제적 약탈의 제국주의적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례로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가 조선에 군사적 개입을 하면서 청나라와 관계는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실질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이었다. 이를 통해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속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종속관계를 명백하게 하고자 했다. 이홍장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와의 면담에서 ‘소속방토(所屬邦土)’라는 말에서 ‘土’는 중국의 각 직성을 지칭하고, ‘邦’은 고려제국을 지칭한다는 답변을 하였다(김수암 2000, 45). 무역장정을 통해 조선과 청의 관계는 ‘근대적 종속관계’로 변하였다. 그러나 조선국왕과 청의 북양대신을 대등한 위치로 설정하고, 종속관계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장정의 대부분의 내용은 상업에 관한 것이었고, 조선의 내정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의 속방 혹은 자주국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일본의 조선 진출이 가속화되자 임오군란을 계기로 간섭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박영효는 이 협정이 조선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서구열강과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박일근 1982, 135), 윤치호는 청나라가 조선을 청의 속번(屬藩)으로 설정했다는 것에 매우 상심하였다(윤치호 2001, 12)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나라가 조선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초기 정착과정에서 화교들은 관상(官商) 일치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후원 아래 이를 인식한 화상들의 횡포가 매우 심각했다. 일반 상거래에서 외상지급이 지연된 경우 중국 영사관의 직인을 찍어 만든 서류로 가옥을 차압하고, 연광을 채굴하기 위해 남의 묘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현직 관리의 땅을 팔지 않는다고 구타하는 등 이들 화교들의 행위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박은경 1981, 28). 그러나 이처럼 청나라의 지원 아래 두렵기만 했던 화교들의 위상은 청일전쟁(1894-1895)의 결과 청나라의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화교에

10) 대한제국과 중국은 1899년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상거래를 지속했으며, 강제적 국권침탈 이후에도 청국 조계지가 폐지되는 대신 화교들의 집단거주는 인정받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부산의 청관을 ‘시나마찌(支那町)’라고 불렀으며 1920년대까지 번성하였다.

대한 조선인의 반감이 극대화되어 발생한 사건이 바로 1931년 만보산(萬寶山) 사건이었다.

1883년 이후 청나라가 ‘移民實邊’<sup>11)</sup> 정책을 실시하면서,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에 40여개의 한인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885년에 이미 청나라는 월간국(越墾局)을 설치하여 이주해온 조선인을 관리하고, 도문강(圖們江) 연안 700리 정도의 지역(간도)을 조선인의 개간지로 설정하고 조선인을 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894년 월간국이 무간국(撫墾局)으로 바뀐 이후 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에 납세를 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남만주의 이권을 확보하고, 만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간도지역에 ‘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면서, 1909년 재만조선인의 관할을 놓고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일늑약 이후 일본은 재만조선인을 일본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간도지역에서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중국과 재만조선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 일제의 만주 침략과정에서 수로공사문제로 발생한 만보산사태는 일제의 무력사용으로 중국농민 1명이 부상당하고, 15명이 체포되는 것으로 귀결되었음에도 일제는 국내에 조선일보로 하여금 만주지역에서 중국인들에 의해 재만조선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2백여 명이 부상당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분노한 수백 명이 화교거주지를 습격하면서 화교배척사건이 일어났다. 발발 4-5일 만에 함경북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약 4백여 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동아일보, 1931년 7월 17일). 『리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42명의 화교가 살해되고, 546명이 부상당하였으며, 91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민두기 1999, 144).

만보산사건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과 중국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만주침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적 사건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무엇보다 조선인과 화교사이의 오랜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민중으로 하여금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고, 민족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장했다는 민두기(1999), 이상경(2011), 박정현(2008; 2014)의 연구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궁핍하게 되면서 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분야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조선인과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인 대신 화교가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화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었다.<sup>12)</sup>

11)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을 때 당시 만주의 인구는 60만에 불과했고, 이후 이들을 산해관 안쪽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북지방에 거주인구가 희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건륭제 때 만주 출신 중 일부를 동북지방으로 이주시켰지만, 동북지방의 빈곤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移民實邊’ 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인의 이주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12) 최승현(2002, 79-80)에 의하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15년 일본인 1.54원, 조선인 0.75원, 화교 0.87원이었고, 1925년 각각 3.74원, 2.15원, 2.46원으로 조선인보다 화교의 임금이 높았다. 그러나 1932년이 되면 2.99원, 1.65원, 1.58원으로 화교의 임금이 조선인의 임금보다 낮아지게 된다.



화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김동인의 소설『감자』에서도 잘 나타난다. 왕서방으로 대표되는 화교와 복녀로 대표되는 조선인의 관계를 통해서 1920년대 조선에서 화교의 이미지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화교를 ‘장개’라고 부른 어원이 장궤(掌櫃, 금고를 담당하는 손, 수완)이라는 주장이 있듯이 화상(華商)으로 시작한 화교는 상업을 천시하던 조선의 상권을 장악했다. 1923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인천의 화교 6,000명이 본국에 송금한 액수가 당시 1,000만 엔(현재 약 1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화교들의 수익이 상당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화교의 경제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후 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화교들은 승전국 국민의 대우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화교들은 정책적 혜택을 받게 되었고, 다시 경제적 지위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있던 무역망을 이용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1946년에는 화교들이 국내 전체 무역 수입 총액의 82%를, 1948년에는 5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지위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화교사회의 이러한 경제호황은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본국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 해방 이전 무역업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화교무역상을 봉쇄하고 외제품을 창고에 보관한 화교를 체포하였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때 시행된 통화개혁으로 인해 현금을 보유한 화교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외환규제법으로 인해 화교들은 공식 환율보다 3-4배 비싼 암시장을 통해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1961년에 제정된 『외국인토지법』, 1970년 제정된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교들의 국내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었지만,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화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동화를 목적으로 배제의 정책을 시행하였던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정부는 화교가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한 국적법을 시행하고, 귀화의 실질적 요건으로 대한민국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언론기관, 금융기관, 국영기업체 부장급 이상의 간부 2명 이상의 추천을 요구하는 법무부지침을 시행함으로써 한국 내에 확실한 연고가 없는 화교들의 귀화를 어렵게 하였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화교에 대해 배제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적 대립을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면서 한중 양국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서로 적대적 관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화교는 국내의 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국본토 출신이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들의 민족적 연대의식은 이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간주하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한국정부 또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배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화교의 경제활동은 국내 신흥 사업가에 의해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의 현지 정착과 달리 한국에서 화교의 정착이 가지는 한계는 이들이 외세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던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외세로서 청나라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화상(華商)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진출이 청나라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착 초기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침략의 대상이 되고,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면서 국내에서 화교의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이들이 향유하고 있던 경제적 지위가 불일치되고, 화교 배제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해방 이후 국내에서 민족주의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화교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제시하였던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중국 본토 출신의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지위를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화교는 중화의식이 강하고,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며, 친족·동향·동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인 관시(關係)를 매우 중시한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들은 관시에 기초한 후이(會)를 기반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화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저력이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김영숙 외 2012, 189). 그러나 이러한 화교의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도 있다. 화교들은 수세기동안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충성심을 유지한다는 Mallory(1956)의 주장과 달리 태국 화교에 대한 연구에서 태국화교는 이민 3세만 되면 현지에 동화된다는 Skinner(1973)의 주장도 있다. 이러한 Skinner의 동화이론은 동남아시아 화교사회의 특징에 대한 중요한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현지 적응은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상응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주민들의 현지적응을 위한 노력은 내국인들의 수용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제적 지위가 적응의 주요 요인이라면, 정치·사회적 지위는 수용의 주요 요인이다. 이 둘 사이의 불일치는 결국 통합과 적응보다는 배제와 소외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 V. 결론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은 먼저 화교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화교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적으로 실패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어도, 성공의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화교가 정착을 실패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새로운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고찰이 가지는 한계는 소수민족의 신분으로 세계에 산재해 있는 화교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한국 화교 또한 균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교집단의 비균질성 속에는 자신의 출생지(중국 내)·거주지(한국 내)에 따른 지역적 차이도 있고 세대 간에 존재하는 이념적 차이도 있다. 또한 직업이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이해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심지어 언어적 차이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송승석 2010, 191). 따라서 화교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국내 화교의 정착이 실패한 요인으로 그들이 초기 등장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경제적 지위가 청나라의 지원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청나라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사회적 지위의 불일치가 배제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서 오늘날 이민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배타성이 좀 있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99%는 같지만 1%만 달라도 차별한다고 한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99%가 다르지만, 1%만 같아도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본다(예동근 외, 2011, 125)는 지적에서 나타나지만, 화교정착의 실패를 이러한 차별성에 기대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차별화가 동일화보다 더 큰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와 동시에 오늘날에는 한국사회에 대표적 소수집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화교사회 또한 내부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김형빈 외 2010, 144), 화교 3·4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들 공동체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또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등 화교가 변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사회에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 또한 향상되고 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여

본국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본국에서의 삶의 형식을 우리 사회에서 재현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사회의 일부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저항 혹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사회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이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정치·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화교가 한국사회에 정착을 실패했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적 사고방식에 기대어 이들을 정책의 대상,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능동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와 내국인들, 기존 성원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치·사회적 지위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정치·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위만 향상된다면 결국 배척과 소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

13) 마이클 왈쩌(Micheal Walzer 1989: 217)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는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김정국 · 최승현 · 이강복 · 최지현. 2003. “한국의 화교연구 배경 및 동향분석.” 『중국인 문과학』 26. 495-516.
- 김두섭 & Limanonda, B. 1997. “타일랜드 화교의 문화변용과 민족정체성.” 『중소연구』 75. 17-42.
- 김명희. 2012. “한국 화교교육 연구-세대별 교육경험탐색.” 『한국교육사학』 34(1). 1-25.
- 김영숙 외. 2012. “화교노인의 생애사 재구성을 통해 본 화교의 정체성.” 『사회복지연구』 43(1), 179-202.
- 김형빈 · 이진석. 2010.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의 형성.” 『지방정부연구』 14(4), 129-148.
- 민두기. 1999. “萬寶山事件(1931)과 韓國言論의 對應 - 相異한 民族主義的 視覺.” 『동양사연구』 65, 143-174.
- 손준식. 1998. “화교경제권과 중국의 화교정책.” 『교포정책자료(僑胞政策資料)』 58, 44-67.
- 송승석 2010. “한국화교연구의 현황과 미래: 동아시아 구역 내 한국화교연구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55, 163-199.
- 이정희. 2005.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대구역사』 80, 71-102.
- 이창호. 2008.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75-122.
- 이창호. 2014. “신화교의 국내이주와 정체성의 정치.” 『민족연구』 58, 4-28.
- 임채완 · 박동훈. 2006. “한국 화교의 역할과 발전방안.” 『한국동북아논총』 41, 5-34.
- 조정남. 1998.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1, 37-63.
- 최승현. 2002. “한국화교 연구배경 및 동향분석.” 『세계화교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중화연구보고서』
- 김기호. 2005. 『초국가시대의 이주민 정체성-한국화교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암. 2000.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경. 1981. 『화교의 정착과 이동: 한국의 경우』.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 이창호. 2007. 『한국 화교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일근. 1982.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to Korea, 1866-1886』. 서울:

신문당.

-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예동근 외. 2011. 『조선족 3세들의 서울이야기』. 서울: 백산서당.
- 윤치호, 송병기 역. 2001. 『윤치호일기 1(국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Pan, Lynn(ed). 1999.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ng, Gungwu. 2000. "The Chinese Overseas: From Earthbound China to the Quest for Aut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윤필준 역. 2003. 중국 밖의 또다른 중국인 화교. 서울: 다락원)
- 庄國土. 1993. "新中國政府對海外華僑政策的變化(1945-1965)."『華僑華人歷史研究編輯部』.

● 투고일: 2015. 5. 1. ● 심사일: 2015. 5. 7. ● 게재확정일: 2015. 5. 13

## **Why the Korean overseas Chinese have failed to settle in the Korea.**

Lee, YoungJea (GyeongSangBuk-Do Council)

After the Im-O Military Revolt, Korean Overseas Chinese has been settle in the korea for 130 year. Despite of 130 year history, the korea is that 'China Town' assessed to have a failed state. Many studies regard a cause of failure as government's exclusion policy about Overseas Chinese. But policy is completed through the support of people. So the failure of settlement is based on the public awareness. That is the result of a discrepancy between economic status and political-social status of the korean overseas Chinese. When it is the Im-O Military Revolt, they landed with the support of the Qing Dynasty. So the Qing Dynasty backed up Overseas Chinese's political and social status by its influence on Joseon Dynasty. But after China was defeated in the Sino-Japanese War, the big fall of their social status caused the discordance between social status and economic status. And the discordance was a cause, contempt and exclusion for Korean Overseas Chinese. This analysis point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is based on the accordance between social status and economic status. For this end, Government policy that matches the economic statu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shall be assigned

〈Key words〉 Overseas Chinese, Migration Policy, Economic Status, Social and Political Status